'청산가리 막걸리' 부녀, 아내·친모 살해 오명 벗었다

광주고법, '존속살해' 등재심서 무죄 판결 사건 16년만…딸'무고'혐의만집행유예 '수사권 남용' 인정…檢 "상고 여부 검토"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 어머니를 살해한 딸 과 이를 도운 혐의로 처벌받은 아버지가 사건 발 생 16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각각 확 정받았던 백점선(75)씨와 그의 딸 A(41)씨에 대 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A씨의 경우 별도적용된 무고혐의에 대해 선징역8개월·집행유예 2년 유지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백씨 부녀는 지난 2009년 7월6일 순천 한 마을에서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를 나눠 마신 주민 4명 중 2명이 죽고 2명이 다친 사건의 범인 이란 오명을 '일단' 벗었다.

사망한 피해자 중 한 명은 백씨 부녀의 아내 이자 친모였는데, 검찰이 피해자와 피고인들 이 '성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지점에 주목하면서 이 사건은 다른 의미로 세간의 이 목을 끌었다.

또 검찰은 이 사건 수사가 본격화될 무렵 A씨 가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건 어 머니의 죽음에 대한 용의 선상에서 벗어나기 위 한 행동으로 보며 백씨 부녀의 '자백'을 바탕으 로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백씨 부녀의 살인 행위 에 대해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8일 오후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피고인 부녀가 사건 발생 1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결정적 증거로 꼽힌 백씨 부녀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유죄

이후 대법원이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면서 백씨 부녀는 2012년 유죄를 확정 받았다. 그로부터 약 10년 만인 2022년 백씨 부녀는 검

찰의 위법·강압 수사 및 수사권 남용을 주장하 며 재심을 청구했다.

특히 수사관과 검사 등이 특정 진술을 유도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백씨 부녀 자백의 증거 능력 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같은 문제 제기를 받아들인 법원이 지난해 1월 재심 개시와 형 집행 정지 결정을 하면서 백 씨 부녀는 풀려났고 이들에게 유죄가 선고된 2 심부터 재판이 재개됐다.

당시 백씨 부녀를 수사했던 검사와 수사관은 재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위법·강압 수사 는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재심 재판부는 "최초 자백을 비롯한 진술 조 서 작성 시 신뢰 관계자의 동석이 이뤄지지 않은 점, 자백 진술의 개연성을 볼 때 수사 기관에서 유도 심문을 반복했던 점이 인정된다"며 "당시 사건 담당 검사는 부녀 관계에 대해 제보를 받았 다고 했지만, 이 법정에서 당사자들의 진술 내용 에 비춰보면 치정이란 범행 동기는 인정되지 않 는다"고 판시했다.

선고 후 A씨는 "검찰과 수사관이 적법한 절차 를 거쳐 증거를 확보하고, 진실한 수사를 했으면 한다"며 "앞으로 이러한 강압 수사 피해자가 생 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백씨 부녀의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사 법 피해자들의 삶이 무죄로나마 회복되기를 바란 다"며 "실적에 눈이 먼 공권력이 약자의 인권을 외 면한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법원 상 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안재영기자

'금품수수·향응' 익산국토관리청 직원 무더기 입건

북부경찰, 사무소장 등 7명 수사 50대 건설업자 등 관련자 7명도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직원들이 특정 업체가 선정 될수 있도록 금품을 받은 혐의로 무더기 입건됐다. 28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업무상 배임・ 뇌물수수·직권남용·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사무소장 A(50) 대)씨와 건설업자 B(50대)씨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직 원 6명(6급 4명·7급 2명), 건설·일반 업체 관계 자 6명 등도 같은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익산 관리청의 발주 공사에 B씨 업체가 선정되도록 관여하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청탁을 받은 A씨는 사업 선정 요건에 특정 공법 을 포함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해 22억원 상당·6개 사업수주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가로골프·리조트·유흥업소등결제비용 300여만원을6차례에 걸쳐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다른 도로시설물 제조 회사 직원의 청 탁을 받아 설치할 필요가 없는 충격 흡수 방지시설 2개를 국비 1억4천여만원으로 구입, 순천 지역 도 로에 설치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는다.

나머지 익산관리청 직원 6명은 입찰에 참여 한 타 업체의 입찰가를 실시간으로 B씨에게 알 려주며 동남아 항공권·골프 결제 비용 등 170여 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익산관리청에서 발주한 다른 공사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A, B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으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구속 영장이 발부되진 않았다. /안재영기자

'계약 브로커' 코트라 직원 사전영장

국내 기업과 동남아 투자처를 연결해 주고 거액 의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대한무역투자진흥 공사(KOTRA) 고위공무원이수사망에올랐다.

28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 처벌법상 뇌물수수·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KOTR A소속3급공무원A씨와북구한광학업체직원B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19 년8월부터2021년7월까지동남아시아한국가를대 상으로수출협약을체결하는과정에서B씨의업체 가 400만달러 상당 계약을 딸 수 있도록 돕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 GIST 산하 연구소 법카 유용·채용 비리 수사

전·현직6명···GIST"1명은외부기관소속"

경찰이 광주과학기술원(GIST·지스트) 산하 문화기술연구소에서 발생한 법인카드 유용과 채용 비리 등의 정황을 확인하고 전·현직 직원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28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GIST에서 불거 진 법인카드 유용 및 부정 채용과 관련해 총 6명을 업무상배임·사기·위계에의한업무방해 등 혐의 로조사중이다.이중전직직원 2명은 2022년 11월 부터 최근까지 28회에 걸쳐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청각 장애인을 위한 물품 사용료을 가 로채는 등 총 1천1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다. 나머지 4명은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3순위자를 합격시키고2순위자를탈락시킨혐의를받는다.

이와 관련, 지스트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구 속된 이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 면접 전형 외부 위원으로 참여한 외부 기관 소속"이라며 "경찰 수사 대상인 전·현직 직원은 5명"이라고 밝혔 /안재영기자

금타 노사, 올해 임단협 최종 타결

금호타이어 노사가 올해 임단협 교섭에 최종 합의했다.

28일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 어지회에 따르면 지난 25-27일 진행된 '2025 단 체교섭 간사잠정합의안 찬·반 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3천491명 중 2천929명 (81%)이 참여한 가 운데 1천941명 (68.6%)이 찬성해 최종 가결됐다.

합의안에는 ▲기본급 3% 인상 ▲격려금 600 만원 지급 ▲안전문화 정착 실천방안 마련 ▲신 입사원 임금체계 개선 ▲타이어 쿠폰 지급 확대 등이 포함됐다. /주성학기자



+